

◆ 政府 施策 ◆

'93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 상공부, 3차 次기기술 · 産銀 지원대상 등 선정 -

상공 자원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및 핵심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1993년도 신규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공고(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3-73호, '93. 9. 3) 했다.

이번에 선정된 '93년도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제3차 지원 대상 210개 과제 및 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 지원 대상 76개 과제 등 286개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중 공업기반개발자금 100억원과 연리 8%의 융자지원자금인 산업은행의 생산기술개발자금 334억원 등 총 43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선정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주물·용접·열처리 등 생산기반기술 및 화학공정기술 등 기초공업분야가 49개, 산업기계·자동화·환경기술 등 기계공업분야가 70개, 전자부품·재료 및 컴퓨터 등 전자정보산업분야가 103개, 섬유원료·염색가공·산업디자인 등 섬유생활공업분야가 64개, 기타분야가 11개 등이다.

상공부는 이들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키 위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개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산·학·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집단을 선정, 관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부공고 내용 ◆

지원자금의 종류	지원대상과제	신 청 요 령
상공자원부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210개 과제)	1)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 * 산업기술연구조합이나 민간생산기술연구소가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어야 함

지원자금의 종류	지원대상과제	신 청 요 령
		2) 우선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 •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 3) 신청자격 제한 ('93. 11. 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5개 과제까지만 참여가 허용됨. • 개별연구원은 2개 과제까지만 총괄 책임자로서 참여가 가능함. 4) 지원내용 : 총개발비 2/3까지 출연지원 단, 기술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분야는 전액 출연지원 5) 접수기간 : '93. 9. 20~9. 25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소인 유효) 6) 접 수 처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 ☎ 152-050) 7) 문 의 처 : 접수처와 동일 (8601-633~637, 643~647, 663~668, 653~657, 673~676)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산업은행 생산 기술개발 자금	(76개 과제)	1) 신청자격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2)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100% 이내 융자지원 3) 접수기간 : '93. 9. 20~9. 25 4) 접 수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본점 금융 1~4부, 출자관리부 • 산업은행 전국 각 지점 5) 기 타 : 대출이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신청요령 등은 산업은행에 문의바람. 6) 문 의 처 : 산업은행 본점 자금부, 금융 1~4부, 출자관리부 (398-6161, 6114)

* 참고 :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과제는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등 정책금융자금 융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상공자원부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신규지원 이상과제<중전기기>**

- Vacuum Interrupter 제조용 Cu-Cr-Bi 전극 제조기술 개발
- Vacuum Interrupter 제조용 Al₂O₃ 세라믹 절연통 제조기술 개발
- 600KVA급 대형방폭형 건식변압기 개발
- 비정질 변압기용 코아자장 열처리 제조기술 개발
- 에어컨용 BLDC Motor 개발

☞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과제 <중전기기>**

- 초소형 1.8" HDD용 Spindler Motor 개발
- 초에너지 절약형 오스템퍼링로 개발
- 진공가스 연질화로 개발
- 전기화학반응 전리기체 폴리싱로 개발
- 송배전선로 및 전력기기용 결정화유리아자 제조공정기술 개발
- Slim Type 3.5" FDD용 Spindle Motor 개발
- See-Saw Handle을 가지는 바이메탈형의 회로보호용 차단기 개발
- 공업용 전증기식 다리미 개발
- 에너지절약형 대형빌딩 공조관리 시스템 개발

新技術 국제특허비용支援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中 · 長期課題 중심개편 —

상공자원부는 기술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와 지원대상을 단기과제 위주에서 중장기 산업기술과제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특허출원비에 대한 신규지원과 국제공동개발비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기술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민간 공동연구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대폭 확대,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기술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현장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추진해

왔으나 단기적인 공통애로 기술과제 도출에 치중, 중장기적인 기술수요의 체계적 파악과 기술비전 제시등 전략적인 면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같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기술수요예측의 경우 국내산업을 기초공업과 전자정보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섬유생활공업등 5개 분야로 구분, 연차별로 산업별 기술계통도를 작성해 기업들에게 기술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중 전자정보공업의 경우 전자부품연구소, 기초공업분야(주조·단조·금형·열처리·도금등 생산기반기술분야)는 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반기술 실용화센터 주관으로 각각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수요예측을 통한 기술비전 제시와 중기거점기술개발시스템 발굴을 위해 '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자재료 기술개발전략' 등 11개 과제를 중기거점기술개발대상으로 선정, 분야별로 적정 주관기관을 선정한 뒤 우수한 개발계획에 한해 내년도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복적인 검토절차도 대폭 간소화, 현행 6개월 정도가 소요되던 기술수요조사를 3개월정도로 단축, 급변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특허화를 통해 선진 외국기업과의 상호특허허여(크로스라이선스)등 전략적 제휴가 용이하도록 국제특허출원비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등의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자하는 경우는 해외전문가 초청비와 해외파견 출장비등 기술교류를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키로 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중 기획공모할 중기거점기술개발대상은 기초공업의 경우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신금속기술개발전략, 촉매의 성능제고 및 화학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전략, 정밀화학중간체 및 원제기술개발 전략 기계공업은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스템고도화, 냉동공조기기의 고효율화기술개발전략, 전자정보공업은 차세대 광전자 기술개발전략, 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자재료 기술개발전략, 정보처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재료 기술개발전략, 차세대 개인통신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기술개발전략, 섬유공업은 비의류형 섬유소재의 생산시스템고도화 기술개발전략, 공통분야는 고속전철 관련기술의 국산화개발전략등이 선정됐다.

▲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내 용	개 선 내 용
기술 수 요 조 사	추진체계	단기기술과제발굴	단기기술과제 발굴에서 중기지점기술과제 도출, 장기기술수요예측으로 확대
	심의기구	30개 분야별 연구개발 기획단	연구개발기획단과 분과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기술개발 기획평가단 구성 운영
	검토기간	6개월	3개월
	특허출원비	지원불가	지원인정
	국제공동개발비	부분인정	대폭인정
	참여기업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현금지원범위	S/W분야 30% 이내	디자인, 설계, S/W분야 50% 이내
	민간공동연구소의 인건비 지원 범위	10% 이내	100% 이내

工産品形式承認制度 대폭 개선키로

－ 事後檢事制 도입 · 승인대상축소 －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키 위해 공산품 형식승인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공산품 형식승인제도의 규제가 지나쳐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공동으로 모든 공산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키로하고 구체적인 개선 기준을 마련했다.

개선기준에 따르면 안전이나 소비자 위해측면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미흡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와 라이프사이클 단축추세를 반영, 신고제로의 전환과 사후검사제 도입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안전을 위한 적정규제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행위를 대폭 완화,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기업이 자체 생산품목에 대한 적정시험검사설비 및 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 자체시험성적서의 효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또 위해의 가능성이 낮은 품목과 특정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은 승인대상에 제외하고 규제대상품목을 세분화, 범위를 명료화하는 등 대상품목을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제도에 따라 상이한 구비서류를 전면 검토, 필요한 치소한의 서류로 축소하고 서류의 표준화와 절차개선등을 통해 처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업기술원과 생산기술연구원 품질인증센터등을 중심으로 시험검사설비를 확충, 다양한 규제에 따른 검사를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일괄봉사체제 구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달중 형식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교통부등 9개 부처가 소관 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상공부에 제출토록하고 상공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경제기획원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수립, 10월중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11월중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는 실태조사반을 편성,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공산품형식승인은 자동차형식승인, 전기용품형식승인, 전산망관련기기형식승인등 20개분야에 걸쳐 총 23개에 달하고 있다.

日기업 對韓투자 · 구매확대 誘導

— 상공부, 산업구조改善 · 輸出擴大 —

상공자원부는 엔高현상을 국내산업의 구조개선과 수출확대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日本기업의 對韓투자 및 물품구매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엔高에 따른 국내업계의 수입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對日 延支給수입 허용범위를 현행 실행관세율 5% 이하 품목에서 10% 이하인 품목으로 확대하고 연지급수입기간도 현행 30일에서 90~1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계류 · 부품 · 소재의 국산화 5개년 계획도 재검토, 조기 추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日本기업의 해외구매 확대 및 산업이전 품목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日本주재 貿易館등 유관기관을 통해 오는 9월 중순까지 기계류 · 자동차부품 · 전자 · 화학 · 조선기자재등을 중심으로 대상품목 및 관련기업을 발굴키로 했다.

또 이달중 민관합동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하는데 이어 10월초까지 국내 업종별 단체 및 중진공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 일본의 관련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유망품목 및 일본기업을 발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단(FIZ)을 1차로 약 20만평규모로 조성, 日本등의 첨단고도기술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기로 했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실수요 범위내의 외국인토지취득도 전면 허용하고 토지취득 자격 및 면적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키 위해 3년이내의 단기외화차입허용범위를 현행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일반제조업까지 확대하며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상업차관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도 차질없이 추진, 현재 83%인 자유화율을 97년까지 93%로 확대하고 외환집중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외환관리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엔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품목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일본의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겨냥한 실효성있는 對日수출촉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엔高로 對日경쟁력이 향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歐美시장에 대한 마케팅활동 및 해외유통망 확충노력을 강화하며 동남아 및 중국시장에서의 플랜트수주활동 강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엔高추세가 기계류등의 국산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제 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을 재검토,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국산화대상품목별로 對日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을 적극추진, 對日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의 早期국산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축소계획과 연계, 현행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해제가능품목과 예외수입 허용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對日투자유치 및 기술도입, 자체 국산개발등을 통해 관련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技術水準 제정

상공자원부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 되는 전문 304개 조항의 '전기설비기술기

준'을 새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실용화된 첨단기술 및 신개발기자재의 사용으로 전기설비안전관련규정의 상당부분이 현실에 부적합하게됨에 따라 이같이 기준을 새로 제정했다.

상공부는 이 기술기준제정을 통해 종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시로 변경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업표준화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적용'으로 단일화했다.

또 신속대응이 곤란한 신기술 및 기자재 사용을 위한 특인사항 (규정의 예외인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전기설비설치자 및 사용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했다.

‘품’ 등급업체 品質經營진단 — 工振廳, 주요기업 國際水準化유도 —

공진청은 국제품질보증시스템 (KS 9000 / ISO 9000) 인증제도의 연내 실시와 관련, ‘품’ 등급획득업체를 KS 9000 / ISO 9000 인증획득업체로 유도하고 국내 주요기업의 품질경영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2100여개의 ‘품’ 등급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경영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품질관리등급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자율관리 실시 이후 등급획득업체들의 자발적인 품질관리활동이 오히려 위축되었을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허위보고서 작성, 시중 유통등급제품의 품질불합격을 상승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이 품질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우선 9월 1일부터 1개월간 일반상품분야 2갑 및 2을 등급 441개사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후 내년 1·4분기중 일반상품분야 1등급업체 324개사, 내년 2·4분기중 수급기업상품업체 738개사 및 가공기술업체 608개사에 대해 품질경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이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단지도를 받도록 권유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업체는 특별사후관리 실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망중소기업과 기술선진화기업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부부담으로 진단 및 지도를 해줄 계획이다.

한편 공진청은 '품' 등급업체를 KS 9000 /ISO 9000 인증업체로 유도키 위해 KS 9000 /ISO 9000 인증 획득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우선구매와 정부입찰자격 요건화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KS허가시에도 KS 9000 /ISO 9000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업 「1사 1혁신」 운동전개 협조요청

공업진흥청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종래 추진해 오던 현장중심의 품질관리를 경영의 전단계에 걸쳐 품질혁신을 추구하는 고객지향적 품질경영으로 전환하여 이를 신산업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산업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는 없으며 품질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기업원의 의식이 품질제일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진청에서는 9월부터 전산업을 대상으로 품질혁신을 위한 「1사 1혁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바, 관련업체에서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공진청에서는 기업의 품질혁신운동을 지원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94년도부터 매년 품질혁신우수 100대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추진사례를 「품질경영 100선」 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협조 요청사항〉

- 각 회사, 각 사업장마다 품질제일주의 슬로건을 게시하여 품질혁신분위기를 전 기업원에게 확산
- 품질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 기업이 각사 실정에 맞는 품질혁신운동을 전개

관세減免물품 事後管理완화

— 關稅廳 9월 6일부터 … 要領개정고시 —

9월 6일부터 關稅減免물품의 사후관리표지 부착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또 재해·노사분규등 긴

급사유가 발생시 구두신고만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수리목적으로 감면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시점에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사무취급요령’을 이같이 개정고시 (제 93-818호, 93. 8. 28)하고 9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자재, 소모성기자재등 일부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감면물품에 사후관리표지를 부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同種同一 물품으로서 사양(TYPE)·모델은 같지만 제조번호가 불명확한 물품등과 같이 다른물품과 구분이 필요한 물품과 ▲사후관리표지가 없으면 확인이 곤란한 물품에만 사후관리표지를 부착하도록 대폭 완화했다.

제해·노사분규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 관세감면물품의 설치(또는 사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두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대신 설치(사용) 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변경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한 修理 또는 加工목적으로 수출한 감면물품이 수리불능등으로 해외에서 멸각처분할 경우 해외공관장등의 멸각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 수출시점에서 사후관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稅法우려수출형태 輸出檢査강화

- 關稅廳, 關稅規程 개정 -

불규칙검사대상물품으로서 3천달러 이하 少額수출인 경우 수출검사가 생략되고 쏘세관에서 반드시 검사받아야 하는 공통필수검사품목이 축소됐다. 대신 지적재산권침해·외화유출등 탈법우려가 있는 特定수출형태에 대한 수출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14일부터 새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수출품검사선별요령(관세청예규 140-2-0-243)중 불규칙검사물품에 대한 규정을 최근 이 같이 개정하고 공통필수검사품목도 9월 1일자로 조정,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등의 수출지원을 위해 불규칙 검사대상선별표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라도 3천달러 상당액이하 少額수출인 경우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불규칙검사 대상선별표(책형)상의 다음 신고번호, 즉 100번인 경우 101번을 검사대상으로 재선정해 가능한 불규칙검사비율(1%)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국세관에서 반드시 수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인 공통필수 검사대상을 종전 17개에서 11개품목으로 축소조정한 대신 新規수출, 原狀態수출, 유명상표수출등 稅法우려가 있는 수출형태(3가지)를 새로 검사대상에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3천달러이하 少額수출등 세관의 品目기준 수출검사부담이 줄어든 대신 수출형태가 통상마찰, 부정환급, 위장수출등 우범성 우려가 있는 수출인 경우 수출통관이 힘들게 됐다.

관세청은 관세행정규제 완화 및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공통필수, (세관)자체필수, 불규칙검사등 수출물품의 전체 검사비율을 9%에서 5%이내로 낮추고 검사대상물품은 非公開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수출패턴 다양화,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품목기준 수출검사만으로는 통상마찰 우려가 있거나 부정환급, 위장수출등 위장·탈법수출에 대한 세관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검사대상을 수출형태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 國內外 情報 ◆

東南亞 海底케이블 敷設 활기

— 경제성장으로 通信수요급증 예상 —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국제통신용 해저케이블 부설프로젝트가 활기를 띠고 있다. ‘APC케이블’이 이달 3일부터 운용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FLAG케이블’ 및 ‘APCN케이블’이 3년후 운용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프로젝트간에는 회선사용료를 둘러싸고 새로운 요금체계의 모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고도성장으로 인해 앞으로 통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관련업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APC케이블’은 일본의 국제디지털통신, 국제전신전화, 美AT & T등이 중심이 되어 부설한 국